

## 4. 第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

資料提供：經濟企劃院

### 7차 5개년계획의 수립경위

- 「7차 5개년계획 수립지침」 작성 및 각부처 시달(90. 11월)
  - 7차계획기간중 대내외여건, 총량전망, 각 부문별 검토과제 설정
  - 33개 부문계획위원회와 주요정책조정위원회, 재정사업조정위원회, 계획조정위원회, 계획심의회 등 구성(총 1,162명)
- 정부 연구기관에서 관련부문계획의 1차시안 작성완료(91. 3월)
  - 각 연구기관별로 수회에 걸쳐 정책협의회 개최
- 33개 부문별로 부문계획(안) 작성 마무리(91. 7월)
  - 각 부처는 연구기관의 시안을 토대로 정책과제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문계획안을 작성
  - 경제기획원에 연구기관, 학계, 관계전문가, 관계부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「주요정책과제실무회의」를 설치하여 각 부문별 주요정책 및 계획을 협의 조정
- 주요정책과제(20개)에 대한 종합조정(91. 8~10월)
  -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계획조정위원회 개최(총량, 인력, 사회간접자본등)
  -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계획심의회 개최(주택·토지정책, 사회보장, 개방시책 등)
- 「7차계획의 기본골격」을 중간보고서 형태로 발표(91. 10. 4)
-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(위원장: 국무총리) 개최(91. 11. 12)
  -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(안) 심의·확정

## 7차 5개년계획의 역할

- 6차계획기간중 추진한 자율화·개방화와 균형발전시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그 토대 위에서 96년까지 추진할 정책방향을 설정
  -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
- 계획작성과정을 통하여 국민각계층이 모든 경제문제를 자기의 이익위주로만 보지 말고 전체의 이익과 종합적이고 장기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제공
- 정부 각 부처의 증장기시책이 경제전체의 흐름과 일관성을 갖고 개발되도록 조정
- 7차계획은 향후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비추어 탄력적으로 운용

### ◆ 5개년계획의 성격변화 ◆

- 자율화·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 간여에 의한 목표 달성보다는 민간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에 주력
- 제반여건 속에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전망치를 제시하여 민간경제활동과 정부정책운용의 지침으로 활용

#### <참고>

일본·대만·프랑스의 경우에도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증장기계획이나 전망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증장기적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

# I. 6차계획기간(87~91)의 실적평가

## 1. 경제총량 운용

### (1) 경제성장

-연평균 10%의 높은 성장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완전 고용달성

-89년 이후에는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물가압력과 국제수지적자 요인으로 작용

	1982~86	1987~91
• 경제성장률(연평균, %)	9.8	10.0
• 실업률(기간말, %)	3.8	2.4

### (2) 물가

-공산품 중심의 도매물가는 연평균 3% 수준의 안정을 유지

-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으로 높은 증가세 시현

	1982~86	1987~91
• 소비자물가(연평균, %)	2.7	7.5
• 도매물가(연평균, %)	0.2	3.3

### (3) 국제수지 및 순외채

-국제수지는 86~89기간중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90~91기간중에는 내수의 확대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적자 발생

-순외채는 91. 6월 현재 106억불로서 86년말(325억불)에 비해 219억불 축소

	'85	'86	'91. 6	증감('86~91. 6)
순외채(억불)	355	325	106	△ 219
(대GNP비율, %)	(39.6)	(31.6)	(3.9)	

(4) 산업구조

-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은 계속 감소추세

-제조업의 비중은 89년 이후 감소

○ 업종별로는 정밀기계와 반도체, 컴퓨터등 전자 등 정보통신산업이 크게 신장  
(경상부가가치기준, %)

	'71	'81	'86	'91(전망)
• 농림어업	27.2	15.6	11.5	8.9
• 광 공 업 (제조업)	22.5 (21.3)	31.3 (29.9)	32.6 (31.7)	29.1 (28.7)
• SOC 및 기타	50.2	53.1	55.9	62.0

(5) 인구 및 고용구조

-80년대 들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둔화 추세

	'64~70	'71~80	'81~90
• 인 구 증 가 율(%)	2.4	1.7	1.2
• 경제활동인구증가율(%)	2.9	3.7	2.5

-산업별 고용구조

○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계속 감소

○ 제조업 취업자비중은 90년에 하락한 후 91년 들어 증가추세

(취업자구성비, %)

	'71	'81	'86	'91(전망)
• 농림어업	48.2	34.2	23.6	17.4
• 광 공 업 (제조업)	14.2 (13.4)	21.3 (20.4)	25.9 (24.7)	27.6 (27.3)
• SOC 및 기타	37.6	44.5	50.5	55.0

## 2. 국민생활의 향상

### (1) 소득수준

-1인당 GNP 및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향상

	<u>81</u>	<u>86</u>	<u>91(전망)</u>
• 1인당 GNP(\$)	1,734	2,505	6,316
• 도시근로자가구소득(천원/월)	281	474	1,150

-임금이 전체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보수 비율이 크게 제고

	<u>81</u>	<u>86</u>	<u>90</u>	<u>91(전망)</u>
• 피용자보수비율(%)	51.2	51.8	59.4	60 수준

### (2) 주 택

-주택 200만호 건설 추진으로 82~86기간중 연간 23만호에 불과하던 주택건설물량은 87~91기간중 연간 48만호 수준으로 확대

	<u>82~86(연평균)</u>	<u>87~91(연평균)</u>
• 주택건설규모(천호)	1,155(231)	2,373(475)
- 공공부문	549(110)	893(179)
- 민간부문	606(121)	1,480(296)
• 주택보급율(기간말, %)	69.7	74.0

-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마련 시행

- 종합토지세제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 법률의 제정 시행
- 부동산등기 의무화제도 도입과 주택가수요억제시책 강화

### (3) 의 료

-농어민의료보험(88년)에 이어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

	<u>81</u>	<u>86</u>	<u>91</u>
• 의료보장수혜율(%)	39.3	57.1	100.0
• 의사 1인당 인구수(명)	2,198	1,984	1,216

(4) 농어촌개발

-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수립추진(89. 3)

○ 농어촌발전기금,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농어촌환경 구조개선사업 지원

	<u>81</u>	<u>86</u>	<u>91(전망)</u>
• 경지정리율(%)	38	46	62 수준
• 농기계보급율(경운기, %)	16.2	35.8	45 수준

- 농공지구 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원개발 촉진

	<u>81</u>	<u>86</u>	<u>91(전망)</u>
• 농공지구수(개소)	-	24	265
• 농외소득비중(%)	32.8	38.7	45 수준

(5) 근로자복지

- 근로자주택 건설계획 수립 추진(90~92년 25만호)

- 최저임금제 시행(88)

-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(89)

-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정(91. 7)

### 3. 주요 추진정책과 종합평가

#### 〈주요추진정책〉

##### (1) 경제의 자율화 추진

- 각종 인·허가제도 등 경쟁제한적 정부규제 개선
  - 공정거래제도의 발전
- 노사관계의 자율화
-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용지, SOC확충 등 종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 추진

##### (2) 형평복지시책의 추진

- 전국민의료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
-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수립 추진(89. 3)
- 근로자복지대책의 수립 추진(91. 5)

##### (3) 경제의 개방화 추진

- 수입자유화, 관세인하, 기술도입 자유화 등 경제체도의 개방·국제화를 통하여 세계 경제질서 개편에 동참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증대하는 계기로 활용
- 올림픽 개최와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소련·중국·동구 등 공산권과의 경제교류 확대(북방교역 규모: 91. 1~8월 72억불)
- 88년 「7.7특별선언」 이후 남북경제교류도 점차 증가

#### 〈종합평가〉

- 6차계획기간중 잠재성장력을 상회하는 10% 수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, 계획기간 초기에는 세계경기의 호전으로 국제수지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성과가

## 크게 호전

- 경제의 자율화·개방화와 형평복지시책의 추진으로 노사분규 등 대가를 치루었으나 경쟁질서가 자리잡히고 국민화합의 토대를 마련
- 그러나 내수위주의 고도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압력의 지속으로 90년 이후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 초래
  - 또한 노사갈등과 임금의 급상승, 그리고 인력난과 부동산투기는 경제사회의 안정기반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
- 근래에는 노사관계의 개선, 주택등 부동산가격의 안정등 경제안정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고, 산업의 경쟁력강화 시책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
  - 기업의 경영혁신노력, 근로자의 근면정신과 국민 각자의 합리적 생활 등 시민윤리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국가경제력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

## II. 7차계획기간(92~96)중 대내외여건전망

### - 세계적으로는

- ◆ 이념의 퇴조와 군비축소 추세속에서 국가간의 경제적 실리 추구와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
- ◆ 개방화·국제화·정보화 등 세계적 조류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
- ◆ 남북의 UN 가입에 이어 한국의 OECD 가입여건이 성숙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

### - 대내적으로는

- ◆ 6공화국에서 터전이 마련된 정치·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되고 경제의 모든 영



- 역에서 자율화·국제화가 진전되는 시기
- ◆ 남북한간에 물자, 정보 및 인적교류가 확대되어 통일전망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
  - ◆ 소득수준이 5천불대에서 1만불대의 선진경제로 이행하면서 산업구조와 국민 생활양식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기

## 1. 세계 경제전망

### (1) 세계경기의 회복과 교역의 확대

- 향후 5년동안의 세계경제성장은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3.2% 수준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
- 세계 교역량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계획기간중 4.9%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상상

(단위: %)

	82~86	87~89	90~91	92~96
• 세계경제성장 (선진국)	2.8 (2.6)	3.7 (3.7)	1.6 (1.9)	3.2 (3.0)
• 세계교역량 (선진국)	3.7 (5.6)	7.6 (6.5)	2.5 (3.7)	4.9 (5.1)

\* 자료: WEFA(91. 10), IMF(91. 10)

### (2) 기술경쟁의 심화와 첨단기술제품의 교역증가

- 90년대 국제교역은 종래의 가격위주의 경쟁으로부터 품질위주의 기술경쟁으로 심화될 전망
- 고도기술관련제품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 예상

### (3)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세계화·정보화의 확산

- 세계교역질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체제가 정착되는 한편, 유럽 경제지역(EEA), 북미자유무역지대 등 경제블록화가 확산될 전망
- 국제교역의 양상에 있어 현지 생산기지를 발판으로 한 교역거래가 확대되고 정보화의 진전으로 금융·지식 등 서비스 거래도 크게 증가할 전망

## 2. 국내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전망

### (1)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둔화

- 인구구조는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14세 이하 인구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노령인구 비중은 늘어날 전망(90년 5.0% → 96년 5.8%)
- 노동력의 공급원인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계속 둔화되어 인력수급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

	<u>87~91</u>	<u>92~96</u>	<u>97~2000</u>
• 경제활동인구증가율(%)	3.3	2.2	1.6

### (2)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생활양식의 변화

-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지역·집단이기주의가 지속될 우려
- 기업경영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자본·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질 전망
-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내구재 및 여가수요가 증대 예상

### (3) 남북교류확대 및 통일에 대한 기대감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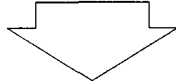
-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 UN 동시가입 등으로 통일여건의 성숙
- 동구 및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북한경제의 개방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간 경제교류가 확대될 전망

### Ⅲ. 경제사회발전의 기본전략

#### 〈기본 목표〉

#### —21세기 경제사회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

- ◆ 자율과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·효율화
- ◆ 경영혁신, 근로정신, 시민윤리의 확립



#### 〈3대 전략〉

#### 1. 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◆ 더욱 치열해질 국제경쟁에 대처하면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균형을 구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
- ◆ 산업평화의 정착과 기업경영의 자기혁신 바탕 위에서 인력 및 기술개발, SOC에로타개 등 기업환경의 개선에 주력

#### 2.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

- ◆ 형평·균형발전으로 공고한 국민화합 기반 마련
- ◆ 농어촌발전과 서민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환경오염 방지와 문화예술진흥에 주력

#### 3. 국제화·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

- ◆ 경제개방의 확산을 국가경제력의 강화계기로 활용
- ◆ 국제사회에 있어 우리의 지위향상

## IV. 7차5개년계획의 주요정책과제

### 〈10대 정책과제〉

#### 1. 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(1)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제도의 개편
- (2)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
- (3) 사회간접자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
- (4)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

#### 2.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

- (5) 지역균형발전
- (6) 서민주택난 해소와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지속적 추진
- (7)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확충과 생활복지의 증진

#### 3. 국제화·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

- (8) 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기능의 재정립
- (9) 경제개방의 확산·발전
- (10)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조성

## 1. 산업의 경쟁력 강화

### 〈요 약〉

-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은 동남아, 미국, 유럽 등에 이미 생산기지 구축에 성공하였고, 미국 및 유럽은 자동화·정보화·전문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으며,

중국·동남아 등 후발개도국들은 저임을 바탕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음.

- 우리 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을 구조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함.

-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

-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경영혁신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
- 정부의 역할은 산업인력의 원활한 공급, 기초·핵심기술의 개발,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주력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

### 1.1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제도의 개편

- ◇ 산업사회에 부응하여 학력위주, 인문위주의 교육제도와 사회적 관행을 능력위주, 기능·기술위주로 전환유도
- ◇ 교육기관의 자율적 발전기반의 구축과 교육투자의 내실화
- ◇ 여성, 고령인력 등 인력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

### (1) 산업기술교육제도의 발전

-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, 기술, 경험을 겸비한 전문직, 중견 기술기능직 중심의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현장지향적 산업기술교육제도를 발전
-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기술인의 양성과 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계속 및 재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산업기술대학」제도 도입
  - 수업연한 및 학위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
  - 학생모집, 학사운용의 자율성 제고
  - 겸임교수제 등 산학간 인적·물적 자원의 공동활용
- 장기적으로는 고교 이후의 학제를 이룬 중심의 학문체계와 현장 중심의 직업기술체계로 분화하는 복선형 체계를 지향

### (2)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제도 발전

- 현행 교육과정에 대학진학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적성에 맞지 않는 진로선택과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
- 실업고의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하여 95년까지 전체 학생중 실업고 학생비율을 50%까지 제고
- 일반고 1학년과정을 마친 후 「진로선택」을 재결정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2학년부터 직업교육을 강화
  - 일반고내에 실업고 교육과정에 준하는 직업교육과정 도입
  - 실업고, 직업학교, 공공훈련기관, 기업의 시설 공동활용

### (3) 교육투자의 내실화

- 학급당 학생수,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적정수준까지 축소하여 초중등 교육환경을 개선
  - '96까지 대도시 국민학교 2학년 이상 2부제 수업 해소
- 국민기초교육 수준향상에 맞추어 92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교육

여건이 낙후된 읍·면지역까지 확대

-사학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투자여건 개선

- 대학평가인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교육여건이 우수한 사립이공계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정원 자율화
- 우수교육기관 중심으로 증원, 재정지원 등에서 우대하여 사학의 자발적인 교육투자 확대 유도
- 기업의 적극적인 교육기관 설립유도

-국립대학의 질향상과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단계로 현행 일반회계제도를 「국립대학특별회계」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법인화 추진

#### (4) 직업훈련제도의 개선

- 중소도시에 고등학교과정에 준하는 직업기술학교 설치
-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을 본격화

#### (5)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촉진

-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7% 수준에서 '96년에는 50% 수준 이상으로 제고
- 다양한 분야로의 여성진출 유도
  - 공고, 과학고 등으로의 여학생 진학 장려
  - 각종 교육과정 이수자와 인력수요처를 연결하는 여성인력 정보망 설치·운영
- 여성의 취업여건 개선
  - 시간제 취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 개선
  - 계획기간중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
  - 여성 직업훈련원 증설 등을 통해 양성 및 직업훈련 강화

## (6) 중·고령자 취업촉진

- 중·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관행 및 관련법제의 개선
-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

## 1.2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

- ◇ 기술개발정책의 과감한 추진으로 「기술입국」 현실
- ◇ 연구개발투자를 현재 GNP대비 2.1%에서 2001년까지 5%를 목표로 하여 96년에는 3~4% 수준으로 확대
- ◇ 산업기술의 확산과 자동화·정보화 투자의 확대
- ◇ 제2차 기계국산화계획 수립 추진

### (1) 기술개발의 촉진

-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재정지원 확충
- 정부투자기관 예산의 일정율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,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촉진을 위하여 금융, 세제 등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
- 현재 기술계 고급인력의 80%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교수, 석·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연구 제도를 활성화
- 중소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·축적할 산업별 전문연구기관의 발전
-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
  - 외국인투자자와 기술도입의 실질적인 자유화 확대
  - 외국인투자를 제약하는 공장입지공급 등 투자환경 개선
  - 한·일, 한·미, 한·소 등 기술협력관계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
- 산업기술개발의 촉진
  - 91~95년중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직결되는 919개 생산기술과제 개발(정부·



민간 공동으로 1조 5,500억원 투자)

-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현재 개발·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1~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138개 과제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신기술 실용화사업 추진

## (2) 자동화·정보화 투자확대 유도

- 금융·세계상 유인 강화
- 주요 산업분야의 정보망을 체계적으로 구축
- 정보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, 「소프트웨어」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

## (3) 제2차 기계국산화 5개년계획의 수립 추진

- 업계 공동의 부품기술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통애로기술개발 촉진
- 기계국산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, 지원방식도 현행 최종수요자 금융위주에서 생산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전환
- 국산수급촉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국산개발 착수단계에서부터 수요업체와 생산업체의 협력체계 구축

## 1.3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

- ◇ 7차계획기간중 SOC투자를 GNP대비 5% 수준으로 확대
- ◇ 수송수단간 연계수송체제의 확립 등 수송체계의 효율화
- ◇ 운송산업의 경쟁제한완화로 발전기반 구축
- ◇ SOC관련 종합조정행정체계의 확립

### (1)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와 자원확충

- 7차계획기간동안 중앙정부사업중 주요 사업간접시설 투자비에 약 36조원 소요

될 것으로 예상(91년 불변가격 기준)

- 재원확충계획

- ① 중기재정계획상 가용재원: 24조원
- ② 계획기간중 부족자금(12조원)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재원조달방안 강구
  -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휘발유,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, 동세수를 도로건설 등 목적으로 사용
  - 전력요금, 항공시설사용료, 용수대 등 사회간접자본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
  -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주체인 사회간접자본(도시내 도로, 지방도 등) 확충재원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세, 수자원세 등 지역개발세의 도입
  -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 확대
  - 도로, 항만 등 부분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민자유치 추진

(2) 수송체계의 효율화와 수송수요의 증가억제 유도

- 수송수단간 연계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해 철도·항만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국적 수송망형성이 가능한 지역에 복합터미널 건설(수도권, 부산권 각 1개소)
  - 복합화물터미널간 화물정보전산망(VAN) 구축을 통해 최적수송경로 제공 및 공차운행 방지
- 일관수송 및 부대업무를 단일사업자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운송주선제도 시행(화물유통촉진법 제정)
- 수송수요 증가억제
  - 사회간접시설 이용의 수익자 부담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증가 억제를 유도하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
  - 교통혼잡이 극심한 애로구간에 대한 장단기 소통원활화대책 강구

(3) 수송관련산업의 규제완화와 물류표준화 추진

- 일반구역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, 용달과

#### 구역화물의 구분 폐지

- 창고업에 대한 현행 허가제도를 등록 또는 신고제도로 전환
- 농업용 매립지 등을 공동창고 또는 대규모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
-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, 합리적인 물류표준을 작성하고 이를 한국공업규격(KS)으로 제정

- (4) SOC중장기 투자우선순위, 재원확보,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수송체계 효율화, 지역간 균형개발 등의 시책을 총괄 조정하는 **종합조정기구 설치**

### 1.4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

- ◇ 초기 개발과정에서는 제한된 경쟁상황에서 기업의 외연적 확장이 가능하였지만 극심한 대내외적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 산업구조의 성숙단계에서는 전문경영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탕
- ◇ 아울러 경쟁에서 이겨 나가려면 기업자체는 더욱 성장하여야 하고, 경영의 비효율적 요인개선 필요
- ◇ 따라서 산업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형성된 기업경영체제를 1세대 개발과정이 지난 성숙단계에 맞게 보다 효율화하여 나가는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건
- ◇ 주요정책방향
  -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는 기본적으로 기업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함.
  - 정부는 세제, 금융, 공정거래 등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노력을 유도
    - (1) 기업의 소유집중 분산
    - (2)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 유도

- (3)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
- (4) 기업퇴출 등 산업구조 조정의 원활화
- (5)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유도
- (6) 중소기업체제의 경쟁력 강화 시책의 발전

### (1) 기업의 소유집중 분산

◆ 현재 46.9%의 내부지분율을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이 가능한 범위내로 축소 유도

- 지나치게 소유집중도가 높은 주력기업의 지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유도
- 공개대상법인의 공개촉진

(91. 4월 현재)

	계열회사수(A)	공개기업수(B)	B/A(%)
• 5대	198	64	32.3
• 30대	561	161	28.7

#### - 무의결권 주식발행의 억제

- 무의결권 주식이 총발행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체제 확립 저해
- 자본시장 육성법상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축소

#### - 상속·증여세제의 세정 강화

- 현행 상속세법상 5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사후관리 및 금융자산에 대한 일괄조회제도 운용
- 합병·증자·감자 등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행위 정기조사와 고액자산소유자의 자산변동내용 및 소득금액 등을 전산집중관리

#### - 금융기관의 기업주식 보유 확대와 국민기업화 촉진

- ① 대기업의 주식보유 분산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확대
  - 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현행 요구불예금의 25% 이내에서 자기자본

의 100% 이내로 확대(은행법 개정안에 기반영)

-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상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여유재원을 장기 주식투자에 활용
- ②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로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국민기업화 추진
  -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하여 대주주의 실질적인 경영지배 가능성을 배제
  -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지분을 한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
  -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축소
  -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 산하 보험, 증권,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도 경영권이 안정되는 범위 안에서 소유분산 유도

## (2) 기업의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유도

-기업집단경영 방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

### ① 주력기업의 경우

-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동결(91. 8 기조치)
- 향후 보증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

### ② 주력 이외 계열기업의 경우

- 1단계로 재무구조(예: 자기자본)에 비하여 지급보증 규모가 과도한 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신규지급보증 제한
- 2단계로 계열기업간의 지급보증제한을 전 계열기업에 적용

### ③ 다만, 위험도가 높은 신기술개발투자의 경우에만 지급보증 인정

-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

- 부당한 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등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운용의 강화
  - 부당한 내부거래의 실태를 조사하여 심사기준을 수립·운용

- 법인세 조사시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내부거래내역을 철저히 확인

### (3)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발전

- 조립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의 자금, 기술, 인력면에서 협력관계 심화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제도를 운용

### (4) 기업퇴출 등 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

-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기준 설정
  - 은행은 일정기간 연체되면 담보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고, 담보부족분은 대손상각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
  - 은행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부실대출금을 상각한 경우에는 세법상 손비인정
- 은행관리 및 회사정리제도의 개선
  -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 설정
- 기업인수합병(M & A) 중개제도의 발전
  - 은행 등 금융기관의 M & A 중개기능 활성화

### (5)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

- 제조업의 유상증자 활성화
- 토지 등 비상각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제도의 개선
- 기업회계제도의 개선
  - 기업회계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의 운용개선방안 마련 추진
  -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부유보가 세제상 우대받고, 사외유출은 불리해지도록 하는 세제를 발전시켜 기업의 내부유보가 확대되도록 유도
- 중복과잉투자를 사전 조정하기 위한 정부-기업-은행-업종별 단체간의 협의체제를 확립하여 선별조정할 수 있는 방안 발전

-여신관리제도의 개선

- 장기적으로는 여신관리의 계열관리제도를 기업별 관리로 전환

## (6)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의 발전

-기술개발, 생산자동화 촉진 등 구조조정시책의 적극 추진

-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기금 조성 확대(92년말 1조원 목표)로 기술개발, 자동화 투자를 중점 지원

- 기술선진화 중소기업을 향후 10년간 2,000개 선정 지원

-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위주로 매년 5,000개 이상 신규 창업 달성

-대기업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전문생산체제 구축

- 수급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 확대

-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규제강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

-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부동산담보 대출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전환

-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자본금 규모 확대

-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

-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입지공급을 위해 소규모 공단조성, 아파트형공장 공급 확대

-소기업의 창업과 전문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도 강화

-지방별 특화산업육성등 지방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

-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Post-UR대비 지원제도 개편

## 2.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

### 〈요 약〉

-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
- 물질적 풍요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가치관과 의식수준의 발전
-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

- 농어촌 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
- 지방자치제의 지역발전 촉진역할을 제고
- 수도권 집중완화로 경제적 비효율을 축소
- 국민생활의 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
  -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
  - 주택, 토지 등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한 관련제도의 실효성 제고
  - 농어민연금,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
  - 환경오염문제에의 적극적 대처
  - 사회안정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
  - 문화예술의 진흥에 주력

## 2.1 지역균형발전

- ◇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
- ◇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교통문제, 환경문제, 주택문제 등 경제적 비효율을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키 위한 수도권집중 완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- ◇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중앙·지방간, 지방정부 상호간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

### 2.1.1 농어촌 구조개선

#### (1) 종합적인 농수산업 구조개선 추진

-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기계화와 생산시설자동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



- 소득증대에 따라 국내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, 국제경쟁이 가능한 성장유망품목의 중점육성
- 영농규모 확대와 전문농어업인력의 육성
-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

### (2) 농어촌의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

-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농촌 공업화와 병행하여 농어촌관광 휴양지 개발사업 등 2, 3차산업의 개발
-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

### (3) 농어촌투자 확충과 수매제도의 개선

- 향후 10년동안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「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」를 설치운영
-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양곡수매제도의 발전
  - 양곡수매제도는 당초 곡가조절 및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목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근래에는 소득보상적 성격으로 변화
  - 근래에는 미곡의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고 미가도 연중 평준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매제도는 양곡의 원활한 유통에 중점을 두어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

## 2. 1. 2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의 육성

### (1)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 제한

-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최대한 억제
- 일정규모 이상의 위락·숙박시설 등 서비스시설의 수도권내 신규입지 제한

(2) 기확정된 청단위기관 등 정부기관의 이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

(3) 현행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관련제도 재정비

(4)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세·금융·토지이용시책의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인구 및 산업의 지방 정착 여건 마련

- 지방도시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으로 인구의 지방정착을 촉진하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 방지

-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

### 2. 1. 3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제도의 발전

(1)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관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

- 중앙정부기능중 현지성·직시성이 요구되는 인·허가사무, 국가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집행적 사무 등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

-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의 확대

(2) 중앙·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조·조정체제 강화

- 「시·도경제협의회」를 활성화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협력기능 제고

-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광역행정사무에 대한 사전조정기능 강화

(3) 지방자주재정의 확충과 지역간 재정불균형 시정

- 지방세의 과표 및 세율을 현실화하고 세원의 지역간 분포가 고른 새로운 지방세 개발

- 교부세, 양여금, 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지원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·운영하여 전체적인 균형개발구도하에 재원을 배분

-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「지역개발금융기금」을 설치

## 2.2 서민주택난 해소와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

- ◇ 7차계획기간중 주택건설규모는 우리 경제능력에 맞도록 매년 50만호(92~96년중: 250만호)를 소형서민주택 위주로 공급
- ◇ 주택의 가수요 억제로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향안정
- ◇ 토지관련세제의 실효성 제고

### (1)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

- 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9만호 건설을 통해 법정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
- 내년부터는 법정영세민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하여 공공임대 또는 장기분할상환하는 분양방식의 공공주택을 매년 5만호 건설
- 근로자주택을 매년 10만호 건설하고 청약저축가입자를 위한 소형분양주택도 매년 10만호 건설

('92~'96년간)

주택유형	주택규모	건설물량	입주대상자
• 영구임대	7~12평	20천호	법정영세민(92 완료)
• 공공주택	12평 수준	250 "	도시저소득계층
• 근로자주택	10~15평	500 "	무주택근로자
• 소형분양	18평 이하	500 "	청약저축가입자
계		1,270천호	

### (2) 국민주택규모를 25.7평에서 18평 이하로 하향조정

- 민간부문의 18평 이하 아파트 건설의무화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

### (3) 주택금융제도의 발전

- 18평 이하 소형주택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
-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지원 조건을 개선하여 소형주택일수록 장기저리로 지원
- 민영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금융자유화 정책에 부합되게 운용

### (4) 주택가수요 억제

- 앞으로는 주택이 소형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중·대형주택의 가격상승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
  -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전산화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관리
  - 중·대형 아파트의 건물분재산세 가산율을 대폭 인상하고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기준을 강화
  - 대도시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는 1단계로는 인별로, 2단계로는 세대별로 재산세를 합산과세
-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추세가 정착되는 때에 분양가의 시장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고

### (5) 토지관련세제의 실효성 제고

-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보유과세 강화
  - 1단계로 지역간·필지간 차이가 극심한 과표현실화 수준을 조속히 평준화(과표 인상율은 연평균 25~30% 수준)
  - 2단계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세율체계 및 구조를 개편
- 아파트부지에 대한 과표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여
  -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재산세부담의 격차를 축소해 나가되 우선적으로 중·대형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
- 지가상승이익의 환수기능 강화

-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대(도시지역 1,000평 → 500평 이상)
-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대폭 축소
- 토지보상제도의 개선
  - 보상지가 평가기준을 현행 재결(협의)시점의 거래가격으로부터 사업인정시점의 공시지가에 재결(협의)시까지의 인근지가상승율을 고려한 가격으로 조정
  - 비업무용과 부채지주 소유토지중 일정액 이상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 도입
- 실수요자 위주로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 규제제도를 정비
  - 관련부처합동의 법령정비 실무작업단 구성운영

## 2.3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확충과 생활복지의 증진

### 2.3.1 사회보장제도의 확충

- ◇ 6차 계획기간중 확충된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용
- ◇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
- ◇ 단순한 소득이전적 사회보장은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
  - 복지정책의 중점을 자립기반의 조성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데 두고자 함.

#### (1) 국민연금제도의 확대

- 92년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~9인 사업장까지 확대
- 농어민 연금제도의 도입

- 농어민은 다른 계층에 비해 노령화 속도가 빠르므로 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노후생활보장이 요구되며, 또한 연금제 도입은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.
- 거출료, 급여체계, 정부지원수준 등 제도설계와 관리체계정비 중심으로 3년 동안 면밀한 준비기간을 거쳐 7차계획 후반기에 실시

## (2) 고용보험제도의 도입

-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야기될 마찰적 실업에 대비하여 고용의 증진 및 안정 그리고 실직자대책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
-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수당 지급 등 사회보장적 기능에 치중할 경우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
  -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의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, 전직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
- 직업안정망 및 직업훈련기관의 확충 등 3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7차계획 후반기에 실시

## (3) 국민의료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용

-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득이전적인 소비성 지출보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중점
-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도모
  - 지역조합의 자체적인 재정안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료비 적정화를 위한 조합과 의료기관간의 협의기능 제고
- 제약회사 광고비의 손비인정 한도설정 등 약제비 절감 유도

## (4)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확대

- 생활보호대상자의 객관적인 선정, 가구별 복지수요의 파악 등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인력에 의한 전달체계의 확립

이 필요

-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확충하고

○ 시·군·구에 「지역사회복지사무소」를 단계적으로 설치

-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조기정착 및 노인, 불우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 
시책 확충

#### (5) 근로자복지증진과 산업평화의 정착

- 근로자복지증진시책의 지속적 추진

○ 7차계획기간중 매년 10만호의 근로자주택건설로 근로자 주거안정 도모

○ 근로자의 계속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고,  
야간특별학급제도를 전문대학까지 확대

○ 사내복지기금의 확충 및 재정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학기금조성 확대

-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제도의 발전

#### (6)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와 공훈선양

- 보훈대상자 생활지원과 복지시책의 강화

- 보훈이념의 확산으로 공훈선양 및 예우기풍 진작

### 2.3.2 환경오염문제에의 적극적 대처

◇ 산업화·도시화 등이 진전되어 오염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집적될 전망이므로  
이에 적극 대처

◇ 향후 환경대책은 사전예방적 오염저감제도의 확충과 사후처리를 병행추진

◇ 국제환경협약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

### (1)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확충

- 전국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 내지 2급수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「맑은 물」을 공급
  - 4대강에 11개 수질영향권의 설정관리 및 하·폐수처리시설 투자 확충
-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LNG공급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대도시로 확대하고,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강화
- 수도권 해안매립지, 광역매립지 등 폐기물 위성매립시설을 확충하고,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시책을 강화

### (2)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오염발생의 저감과 동시에 환경개선투자재원 확보 도모

- 대형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「환경개선부담금」제도 도입
- 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등에 회수·처리비를 사전 납부케 하고 처리후 환불하여 주는 「사전예치금제도」 도입

### (3) 최근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수단화하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이 국제환경협약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적극 추진

## 2.3.3 문화예술의 진흥

- (1)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확충 및 문화시설 등 문화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문화의 국제화를 추진
- (2) 지방문화원의 기능 확충, 권역별 고도 문화정비,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활동 참여여건의 개선도모



### 2.3.4 사회안전과 새로운 생활복지 증진

#### (1) 사회불안요소로부터의 국민생활안전을 보장

- 각종 범죄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, 컴퓨터·환경·국제범죄 등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치안장비의 현대화, 인력보강 등 치안능력 제고와 사전 범죄예방기능 보강
- 교통행정의 전산화, 교통안전표식의 개선, 교통관제센터의 운영보강 등을 통한 교통사고의 강력한 예방
- 소방장비의 현대화, 자위소방능력 향상 등 방재기능을 강화
- 의약품, 가공식품, 환경사고 등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보완
- 불량식품에 대한 철저한 규제 등 식품위생의 강화

#### (2) 국민체육진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윤리관 확립 유도

-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
-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기반 마련
-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시책 확충

### 3. 국제화·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

#### 〈요 약〉

- 그동안 공산품 수입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서비스시장에 대한 부분적 개방이 실시되었으며, GATT/BOP졸업(89. 10)으로 농산물에 대한 점진적 개방을 약속한 상태

- 현재 공산품의 경우 개방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국제적 자본거래와 경상무역의 거래의 자유화는 아직 미흡
- 향후 세계적 조류인 개방·국제화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
  - 금융·운송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대내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UR협상에 따른 대외개방에 사전 대응
  - 국내의 제도·관행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재정비
  - 경쟁제한적 국제거래의 규제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
-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 UN동시가입 등으로 평화공존의 시대가 전개되고 정치·경제상황의 급변에 따른 통일여건의 급격한 성숙에 대비하여 통일기반을 착실히 조성

### 3.1 자율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기능의 재정립

#### 3.1.1 금융자율화의 본격 추진

- ◇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하여,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 완화
- ◇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
- ◇ 금융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

#### (1) 금리자유화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

- 규제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하

기 위해 금리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

- 은행대출금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금리를 7차계획 초반에 자유화
  - 예금금리는 장기수신금리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
- 통화관리방식을 직접적인 대출규제방식으로부터 공개시장조작, 한은 재할인, 지급준비정책활용 등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

## (2)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감독기능의 강화

- 금융기관 경영자율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
- 경쟁심화로 야기될 수 있는 금융불안정에 대비하여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강구

## (3) 정책금융체계의 재편

- 한국은행의 자동재할자금, 일반은행의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
- 기계국산화, 기술개발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특수은행과 재정투융자기능을 확충하여 자금공급 확대
  -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금융공급 전담기관으로 발전되도록 하고, 재정지원, 채권발행금리 자유화 및 발행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조달자금 확충
  - 재정투융자와 관련된 예산회계제도 및 기금제도를 개선하여 공적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 강구

## (4) 국제화시대에 맞도록 외환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

- 금리, 환율, 자본이동의 상호연관관계를 감안 금융, 외환, 자본시장의 연계적 자유화 추진
- 외환관리체계를 금지법체계에서 「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」으로 전환하여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을 확대

-92년 증권시장 개방을 계기로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

### 3.1.2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

#### (1)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

-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를 계속 정비하여 기업활동의 불편을 제거
-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환경보전, 국토이용규제, 식품안전, 신용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회적 규제는 보다 명료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개선

#### (2) 공기업의 민영화와 민간역할의 확대

-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
- 정부서비스중 도시교통, 교육, 보건, 통신, 쓰레기처리 등 많은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

#### (3) 행정민주화와 행정정보화의 본격추진

- 행정정보의 공개확대와 개인정보의 보호
- 행정사무의 자동화·전산화 추진

#### (4) 행정전문화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

### 3.2 경제개방의 확산·발전

#### (1) 교역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조화

-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관세율체계의 확립
- 외국의 덤핑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발전

## (2) 서비스산업 개방 및 경쟁력 제고

- 정보통신관련 서비스 등 전체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쟁력 향상 촉진
- 규제완화정책의 운용을 통해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도모
- 서비스 분야별 장기발전방향 제시
  - 선진국의 새로운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
  - 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항공·해운 등 운송분야의 발전

## (3) 농산물 개방

-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약속(89. 10) 및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수입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
- 농업에 관한 각종 지원제도를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

## (4)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입 추진

- 가입시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과 자본거래 자유화 규약 준수능력의 지속적 배양
  - 향후 UR협상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OECD기준에 미흡한 운송, 보험, 은행 및 금융서비스분야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
  - 92년 자본시장 개방을 계기로 증권매매, 외국인투자, 단기자본거래 등 제반 자본거래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
-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(ODA)를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상응하게 확대
- OECD 가입에 필요한 국내여건을 조성하여 7차계획기간 후반기에 가입 추진

## (5)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

- 기업의 제3국에서의 현지생산활동 촉진
- EC지역에 대한 유통 및 금융진출 확대

### (6)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확대

- APEC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연안국간의 정책대화 및 경제협력발전에 적극 기여
- 동남아개도국들과의 경제외교와 협력을 강화
- 중국, 소련, 북한, 일본 및 미국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경제협력을 적극 추진

### 3.3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

- ◇ 계획기간중(92~96년) 「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」의 제1단계인 남북교류협력기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기를 위한 여건 조성
- ◇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「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」 채택을 통하여 통행·통신·통상 및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- ◇ 통일을 당면한 현실적 과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비한 우리 경제사회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

#### (1) 남북물자교역 확대

- 남북교역은 남북의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적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
- 남북간 협정체결을 통해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제도화하여 교역 활성화
- 교역량 증대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통상협정체결, 은행간 청산결제구조 개설횐직교역항 지정, 공동자유시장 서키 드 츠지

#### (2) 남북경제협력 추진

-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, 남북경제지원차원에서의 경제협력도 적극 추진

- 남북합작공장 건설추진과 제3국 공동추진 모색
-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와 투자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확충
- UND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증진방안 적극 강구

### (3) 환경보전, 관광, 문화, 학술, 체육 등의 교류 확대

- 환경은 민족공동체의 기본적 공유자본이라는 공통인식하에 환경보호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 및 감시활동 추진
- 관광, 문화, 예술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증대시키고 민족의 동질성 제고

### (4) 북한 정보자료의 단계적 개방

- 북한정보자료의 공개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정보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방
- 민간전문가들에게도 북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관련연구를 촉진

### (5) 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별 제도의 연구

- 통일에 대비하여 금융제도, 재산권구조, 재정조세제도, 사회보장 및 기본수요 등 각 분야별 제도의 연구

## V. 주요 경제전망

### 1. 경제안정의 정착

- 계획기간중 해외물가상승율이 5% 이내의 안정추세를 보일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- 생산성 범위에서 임금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총수요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이 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경제안정을 정착하고 환경·에너지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7.5% 수준의 안정 성장 지속

-계획기간중 물가전망

- 소비자물가는 계획초반기에는 그동안의 초과수요압력이 지속되어 7~8% 수준, 계획후반기에는 5%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
- 도매물가는 2~3% 수준의 낮은 상승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

	87~89	90~91	92~93	94~96
소비자물가(%)	6.1	9.5	7~8	5수준
도매물가(%)	2.0	5.2	2~3	2~3

2. 국제수지의 구조적 균형달성

-7차계획기간중 국제수지 여건은

- 세계성장 회복과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 외부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
-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국제수지 개선의 관건

-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

<수입면>

-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임금안정과 총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
- 기계류 및 전기·전자 부품산업의 적극적인 촉진
- 에너지절약형 산업 및 소비구조로의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소비 탄성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(90년 1.6 → 96년 1.0)

<수출면>

- 기업의 경영혁신노력 강화와 생산적인 노력관계의 정착
- 인력 및 기술개발, SOC 확충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



-계획기간중 국제수지전망

-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2~14% 수준으로 수입증가율(10~12%)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
- 경상수지는 중반기 이후 균형수준으로 개선되어 후반기에는 GNP대비 1% 수준의 흑자 전망

	82~86	87~91	92~96
수출증가율(%)	10.3	15.6	12~14
수입증가율(%)	3.9	20.7	10~12
경상수지 대GNP비율(%)	4.5	△ 3 수준	1 수준

(기간말 기준)

3.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

-산업구조

- 계획기간중 제조업은 연평균 9.8%의 성장을 이룩하여 96년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전체 GNP에 대한 비중이 30% 이상으로 제고

(부가가치구성비, %)

	86	91	96	92~96 연평균성장율
• 농림어업	11.5	8.9	6.8	1.5
• 광 공 업	32.6	29.1	30.9	9.6
(제조업)	(31.7)	(28.7)	(30.7)	(9.8)
• SOC 및 기타	55.9	62.0	62.3	7.2

-취업구조

- 제조업부문은 연평균 3.4%의 고용증가를 보여 전체 취업자에 대한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96년에 29% 수준으로 제고
- SOC 및 기타서비스부문은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출현으로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

	(취업자구성비, %)			
	86	91	96	92~96 연평균증가율
• 농림어업	23.6	17.4	12.9	△3.4
• 광 공 업	25.9	27.6	29.2	3.3
(제조업)	(24.7)	(27.3)	(29.0)	3.4
• SOC 및 기타	50.5	55.0	57.9	3.1

### I. 재정운용의 효율화

-7차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, 교육, 사회개발 등 5개부문의 재정수요는 96년에 GNP 대비 10.4%로 전망되어 90년보다 4%「포인트」 정도 증가 예상

	〈주요부문별 재정수요〉		
	90(A)	96(B)	증감(B-A)
• 사회간접자본	1.6	2.9	+1.3
• 교육, 사회개발	4.0	6.0	+2.0
• 과학기술, 환경	0.8	1.5	+0.7
합 계	6.4	10.4	+4.0

(대GNP비율, %)

-이상의 재정수요를 비인플레이적 방식으로 충당

① 조세부담율을 2~3%「포인트」 제고

	91	96
조세부담율(%)	19.5	22 수준
(국 세)	15.5	17 이내
(지방세)	4.0	5 내외

②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의 재원활용을 확대

③ 재정지출구조의 효율성 제고

-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종합평가기능 강화
- 방위비중 과학기술투자지출의 비중을 점차 제고
- 지방자치제의 본격화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

## 7차계획 주요총량 지표

	86	91	96	연평균 증가율(%)	
				87~91	92~96
경 상 GNP(조원)	91	198	357	10.0 <sup>1)</sup>	7.5 <sup>1)</sup>
"    (억불)	1,028	2,727	4,926	21.5	12.5
1 인 당 GNP(불)	2,505	6,316	10,908	20.3	11.5
수 출(통관, 억불)	347	710~720	1,300~1,400	15.6	12~14
수 입(    "    )	316	805~815	1,300~1,400	20.7	10~12
경 상 수 지(억불)	46	△80 수준	50~70	-	-
(GNP대비, %)	(4.5)	(△3 수준)	(1 수준)		
소 비 자 물 가(%)	1.4	9.5 내외	5 수준	7.4	6 내외
도 매 물 가(%)	△2.6	3 수준	2~3	3.3	2~3
제조업 부가가치	31.7	28.7	30.7	10.5	9.8
(구성비, %)					
총 취 업 자(천명)	15,505	18,505	20,637	3.6	2.2
제조업취업자(천명)	3,826	5,048	5,975	5.8	3.4
(구성비, %)	(24.7)	(27.3)	(29.0)		
실 업 율(%)	3.8	2.4	2.4	-	-

주: 1) 실질성장률

	'81	'86	'91(전망)	'96(전망)
<b>&lt;인 구&gt;</b>				
• 총 인 구(천명)	38,723	41,184	43,268	45,248
(증가율)(%)	(1.56)	(0.95)	(0.93)	(0.88)
• 경제활동참가율(%)	58.5	57.1	60.4	62.2
(여 성)	(42.3)	(43.1)	(47.5)	(50.0)
• 평균수명(세)	66.9	69.5	71.6	74.0
<b>&lt;보건의료&gt;</b>				
• 의료보장수혜율(%)	39.2	57.1	100.0	100.0
(재정지원규모)(억원)	(412)	(1,025)	(8,490)	(12,000)
• 의사1인당인구 <sup>1)</sup> (명)	2,198	1,984	1,216	956
• 병상당 인구(명)	974	519	470	344
<b>&lt;주거 및 생활환경&gt;</b>				
• 주택건설(5개년누계, 천호)	1,116	1,155	2,373	2,500
(주택보급율)(%)	(70.5)	(69.7)	(74.0)	(81.4)
• 상수도보급율(%)	57.0	68.7	79.5	85.0
• 하수처리율(%)	0.0	8.0	35.0	65.0
• 이노종말처리율(%)	63.5	86.1	91.0	100.0

주: 1) 취업의사 기준

	'81	'86	'91(전망)	'96(전망)
〈농 어 촌〉				
• 경지정리율(%)	38	46	62	80
• 농가소득(천원/월)	307	500	990	1,415
〈사회간접시설〉				
• 도로포장율(%)	34.1	54.2	83.0	100.0
(국 도)(%)	(55.3)	(77.1)	(95.0)	(100.0)
(지방도)(%)	(11.0)	(37.2)	(79.0)	(100.0)
• 전화보급율(100명당 대수)	8.4	18.3	34.3	49.7
〈교육환경〉				
• 학급당 학생수(국교, 명)	48.8	43.5	40.8	37.8
(대도시국교, 명)	64.0	60.0	50.0	45.0
• 유치원취원율(%)	17.0	36.7	54.8	59.5
• 고등학교취학율(%)	68.6	81.7	87.6	89.4
• 고등교육취학율 <sup>2)</sup> (%)	20.7	37.0	38.1	53.6

주: 2) 4년제대학, 전문대학, 교육대학 포함.